

송하진 지사, 내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단체 사전 포석활동 시동
미래성장사업 예산 확보·도정
주요 현안 법률 통과 지원 요청



송하진 도지사가 21일 서울 국회를 방문하여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이상수 예결위원장을 만나 19년 국가예산 반영과 도정 주요 현안 법률 통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마무리에 접어들어 시점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해 사전 포석활동을 전개 추진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21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이상수 예결위원장, 김광목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사무처장 등 국회 핵심 지도부를 순차적으로 방문, 2019년 국가예산 반영과 도정 주요 현안 법률 통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의 이와 같은 발 빠른 국회활동 배경에는 국정감사(10.10~29일)가 마무리 되면 1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관련 상임위 심사 진행 예정에 있어 상임위 심사단계 이전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에게 건의한 내용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전 타당성 용역 신속추진과 공기단축을 위한 예산면제 건의와 함께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5억원 요청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미래성장동력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인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장비비 50억원 ▲중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문제인 정부 전북지역 대신(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사업의 핵심사업인 ‘중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용역비 50억원 필요성 ▲새만금 SOC구축 6개사업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순환링 건설’, ‘새만금 상수도 건설’, 등 새만금 SOC 핵심 6개사업 국비 6,300억원 ▲새만금 장기임대산업용 지 적기 확보·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552억원 전액 반영 요청 ▲도정 현안 4대법률

제·개정 지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탄소소재법’,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개정과, 2023 새만금 잠머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마련된 ‘잠머리특별법(안)’,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신속한 절차이행 추진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법’이 연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했다.

전북도는 향후 예산심사가 본격 시작되는 11월 초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 및 수도권 연고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작성 제공 하는 등 국회단체 예산증액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성기자

김상곤 “정시30% 고교 교육정상화 후퇴 아냐… 부작용 조정 차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위주 전형(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하는 내용의 2022학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과 관련 “급격한 변화속에서 나온 부작용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

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초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비롯해 고교 교육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수시와 정시의

구분수에 수시가 급격하게 증대하면서 정시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서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면도 없지 않다”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돼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文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연기… 태풍 ‘솔릭’ 대비 차원

靑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간담회 재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북상 중인 태풍 대비를 위해 연기했다.

청와대는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22일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연기됐

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 간담회 연기는) 지역의 재난대응 책임자인 시·도지사들이 태풍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에 연기된 시·도지사 간담회는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후 진행될 시·도지사 간담회는 전국 17개 시도가 마련한 각각의 일자리 구상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자체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송성환 도의장 ‘국민연금 1일 명예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에서 명예 지사장직 수행… 직원·주민 불편사항 청취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21일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에서 1일 명예지사직에 위촉돼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와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청취했다.

송 의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정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명예지사장 어깨띠를 두르고 민원실을 방문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송 의장은 “1일 명예지사장직을 맡아 업무보고를 받고 민원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공단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민을 직접 만나 민심을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험료 인상을 끝자



송 의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정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명예지사장 어깨띠를 두르고 민원실을 방문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홍보하

고 도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는데 전주완주지사부터 앞장서 달

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통일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식 추진”

남북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 이달 말 추가 현지공동조사 진행키로

통일부는 21일 남북 철도·도로 협력과 관련해 “북한 현지 공동조사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금년 내 착공식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관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말

했다

통일부는 “우선 당면한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를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보공유, 기술교류 등 남북 철도·도로 협력 기반 조성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 등 유관부처 협의 하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지난달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연결구간을 공동점검하고 공동연구 조사단 회의 등을 개최했다. 이달 말에는 추가현지공동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3~20일에는 경의선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점검하고 공동연구조사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현재 동해선 도로 현지공동조사를 위

해 일정 등을 북측과 협의 중이다.

더불어 통일부는 대통령 8·15 경축사 후속조치와 관련해 “남북 간 협의, 국제관계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 종합계획(안)을 구체화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미 간 관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과 차기 적십자회담을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 ▲상봉 정리화 등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 ▲영양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등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과 국민공감대 확산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김영주 “지금 추세라면 하반기 고용도 어려워… 최저임금이 주원인 아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의 추세라면 하반기에도 고용불안이 회복되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고용감소가 최저임금의 영향 이라기보다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요인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하반기 고용예측을 묻는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7월 고용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관련 통계청 등 정부 관련부처가 실체를 파악중”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에도 고용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고용의 급감은 최저임금보다 경제지표가 안좋은게 더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 이유로 “7월에 고용이 급감했지만 상용직은 늘고 4대보험

가입자도 10만명 이상 늘었다”며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것은 한 요인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 요인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비정규직과 여성”이라며 “하지만 7월 고용에서 여성은 늘어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진안군 공고 제2018-766호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 주민 재공람 공고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진안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사항에 대하여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 공고합니다.

- 공람사항
 -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
 - ※ 재공람 사유: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2017년 7월 24일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나,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진안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수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재공람 하고자 함.
- 관련도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소 · 도면: “신승생택”
-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기간: 신문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 장소 및 의견 제출
 - 가. 열람장소: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및 읍·면 사무소
 - 나. 열람도서(열람장소에 비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다. 의견제출방법: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서면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건설교통과(063-430-2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2일 진 안 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